

한국의 식민지 근대는 어떠한 성격의 사회였나?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오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종래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던 군주제 대신에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기술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소비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원동력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라고 해서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박완서의 회고에 “나라는 개인을 스쳐간 문화의 부피”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변모했다. 흔히 하는 말로 ‘대중문화’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상황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변모를 겪어왔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이 초래한 변화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역사인식의 가장 큰 과제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핵심으로 하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일청산이 좌절된 상황에서 한동안은 일제강점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친일 세력이 반공을 내세워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남아 있는 현실은 역사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일제강점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연구자들은 한국 역사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의 일단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96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식민지 수탈론’ 또는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불리게 되는 역사인식이 학계의 큰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재적 발전론에서는 일제강점기를 한국인에 의한 자율적 문명화와 근대화가 좌절된 시기로 파악했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우리 민족을 노예화했고, 자원·금융·공공사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민족산업을 억제한 반면, 사회·문화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와 민족문화를 파괴하고 민족말살 정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는 근대로의 내재적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로,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민족차별과 수탈 때문에 내재적 이행 가능성이 압살당한 민족사의 암흑기로 인식된다.

조선 후기 이래 내재적으로 성장해온 근대화의 싹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 짓밟히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아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 더 나아가 해방 후의 새로운 국가 건설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려는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의식은 결국 식민사관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사의 주체적·내재적 발전 과정을 합법칙적으로 파악하고 체계화하려 했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을 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함으로써 정치·사회·문화 등의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아울러 발전의 계기와 요인을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구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교류의 영향에 대한 성찰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역사발전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그리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은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모든 요인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안팎의 상황이 바뀔에 따라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새로운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그 핵심은 일제가 조선을 억압하고 착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인적 자원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이것이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발전을 이루는 주된 요인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흔히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각은 한국 근현대사를 ‘침략과 저항’ 또는 ‘수탈과 저발전’이 아니라 ‘수탈과 발전’,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발전을 통해 파악하려는 것이다.

애초에 일본과 미국에서 유포되던 식민지 근대화론은 국내에도 수입되어 일제강점기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로 부각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의 발전은 조선 후기 이래의 내재적 변화가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낳은 근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사회발전, 또는 근대화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는 주로 물질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의 변화에 집중되고 있다. 단순화시키자면 ‘경제성장=근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경제라는 요인 하나만 갖고 근대화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인 역사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통계수치 몇 개를 갖고 일제강점기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수치상으로 경제가 성장했으니, 덩달아 식민지 조선 사회의 다른 모든 부분도 발전하고 조선인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는 속내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초에 작가 염상섭은 『만세전』이라는 소설에서, 이층집도 늘고 양옥도 생기면서 “시가가 나날이 번창하여가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중은 오히려 집문서마저 식산은행에 뺏기고 만주로 쫓겨가는 근대화의 역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염상섭은 “누구의 이층이요 누구를 위한 위생이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작가 이기영은 『서화』라는 소설에서 “세상은 점점 개명을 한단는데 사람 살기는 해마다 더 곤란하니 웬일인가”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근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민중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는 데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식민지 근대에 대해 가지는 문제의식도 마찬가지로 여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일제강점기를 식민지와 근대가 중첩된 시기로 이해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른바 ‘탈민족론’과 ‘식민지 근대성론’은 모두 일제강점기를 민족(주의)·민중(주의)의 좁은 틀에 사로잡혀 단순한 식민지로만 보는 것을 거부한다. 식민지 근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식민지 조선이 식민지이자 동시에 근대사회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과 저항의 양 극단 사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

면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가운데 때로는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제에 협력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식민지 근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식민지 공공성’을 들고 나온다.

식민지 공공성이란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가족이나 시장과는 달리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러면서도 일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치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 시장, 국가를 제외한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적인 것이 식민지 공공성이다. 이를테면 학교를 세우고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닦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제와의 교섭과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실현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공공성에 대한 이해야말로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는 것이 탈민족론자들의 생각이다.

‘식민지 근대성론’은 규율, 헤게모니, 매스미디어, 대중문화, 성차(gender) 등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식민지 근대성론의 관심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거시적 권력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식민지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성론은 분명 식민지 근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기한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에서 상대적으로 ‘근대’를 중시할 경우 일제강점기에 현실로 존재했던 가해와 피해라는 사실이 역사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험성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일제는 식민지 지배라는 목적을 위해 조선에 근대를 이식하려 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 근대가 아니라 봉건, 전통이라는 요소도 적극 활용하려 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초에 전개된 농촌진흥운동의 핵심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던 야마자키 노부요시(山崎延吉)는 조선 농촌을 진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장유유서(長幼有序), 상하유별(上下有別) 같은 전통적 유교윤리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일본의 최고 학부인 도쿄(東京)제국대학 출신 엘리트로서 함경북도 지사를 지낸 도미나가 후미이치(富永文一)도 1930년대 초에 조선시대의 전통 향약을 일본식 국가주의로 재해석한 관북향약(關北鄉約)을 만들어 함경북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 세상은 이미 근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생뚱맞게 전통윤리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그런 주장이 식민지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쓰이던 것이 일제강점기였다.

효과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전통과 결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던 것이 일제가 내세운 근대였다. 특히 일제강점 말기의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내세운 가족의 연장으로서의 국가의 가장, 곧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효의 윤리는 근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근대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봉건 유제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본질이었다. 이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근대, 곧 식민지 근대는 서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던 온전한 근대가 아니라 근대와 전통이 묘하게 뒤섞인 일그러진 근대였다.

지난 한 세기 이상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이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물질의 궁핍, 신분제의 구속, 사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비해 근대사회란 한편으로는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해지고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사회,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가리킨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발전 또는 근대화란 단지 산업사회로의 물질적 진보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평등, 자유,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아울러 의미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한국 근대화에 내재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후자를 도외시킨 채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놓인 것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는 식민지로부터 경제 잉여를 유출하기 위한 통로로, 또한 식민지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장치로 회사, 공장, 은행 등의 기구는 물론 경찰, 학교, 감옥, 병원 등의 근대 제도를 식민지에 이식했다. 식민지 종주국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출현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런 이식을 확대해석해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식민지가 근대화되는 데 필요한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의한 근대의 이식은 어디까지나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수탈이나 발전이나 하는 경제 차원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권력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의 민주화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의 움직임은 탄압의 대상일 뿐이었다. 근대화의 주체로서의 시민계급의 형성이란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20세기 이후 민주주의의 일반적 지표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사상·양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권리의 보장, 보통선거제도·의회민주주의·정당제도 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의 보장, 노동조합과 복지제도 등을 통한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동자 생존권의 보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식민지 본국인 일본 안에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일제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띤 관료조직, 경찰, 법원, 학교 등의 지배기구를 통해 식민지 조선을 병영화했다. 여기에 일제강점 말기에는 청년단, 청년훈련소 등의 이름 아래 대규모 관제동원단체를 만들어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다. 1930년대 말 이후 식민지 조선 곳곳에 울려 퍼진 ‘국민 총동원’의 구호는 병영국가의 정점을 보여준다. 집단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바탕으로 한 근대사회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근대사회란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가리킨다. 여기서 법은 집단이나 전체를 내세워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근대 법은 사회구성원의 생존 및 재산, 정신적 활동의 보장이 국가이익의 보호에 우선한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현실적으로는 일본제국의 존립, 식민지 지배권력의 유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조선 민족의 생존보다 우선했다. 일제가 만든 각종 법은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였다. 그런 의미에서 1945년 이전 식민지 조선의 근대란 개인의 자유, 자율, 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 근대의 상당 부분은 외형상의 근대를 가장한 사실상의 전근대 또는 반(反)근대였다.

식민지 근대를 이해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일제강점기 조선은 결코 근대성이 균질하게 보급된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단적인 보기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을 처음 안 것은 도시 사람들이었다. 라디오라는 근대매체 덕분이었다. 대다수의 농촌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해방의 만세를 부를 수 있었다. 일본의 항복방송을 라디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차야말로 근대의 비균질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이해는 이 차이를 무시한 채 주로 도시의 일부 사람들, 특히 젊은 지식인층에 초점을 맞추어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에 근대성이 충만했던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조선 사회가 전통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전근대사회의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난 완전한 근대 사회도 아니었다는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이다.